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용갑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502
----------	------

발의연월일 : 2024. 12. 16.

발 의 자 : 박용갑 · 장철민 · 박정현
김영호 · 복기왕 · 조승래
소병훈 · 안태준 · 윤준병
한정애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등 정보와 맞춤형 주거복지 상담을 제공하기 위한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특히 정부는 2020년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2025년까지 모든 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고, ‘2023년 국토교통부 주요정책과제’를 통해 ‘2027년까지 일정 규모 이상 지방자치단체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 대전과 울산, 경북, 경남 등에는 주거복지센터가 단 1개도 설치되어 있지 않음.

이에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에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의무화하고, 시·도지사가 둘 이상의 시·군·구에 통합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이나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 설치·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

원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주거복지센터 업무에 주거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에 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국민주거안정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주거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를 “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으며, 시·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광역주거복지센터 및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4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시·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수요 및 주거약자의 수, 지리적 접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군·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

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 가구

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 가구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과 분담금을 3개월 이

상 채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가구

라.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함한다),
「수도법」 제39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로서 주거
복지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업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다.</u> <단서 신설></p> <p>1. · 2. (생 략) <신 설></p>	<p>제22조(주거복지센터)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u>주거복지센터를 둘 수 있으며, 시 · 도지사 및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시장은 광역주거복지센터 및 거점형 주거복지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u> 다만, 시 · 도지사는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수요 및 주거약자의 수, 지리적 접근성,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둘 이상의 시 · 군 · 구를 통합하여 하나의 주거복지센터를 설치 · 운영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주거 위기가구의 발굴 및 지원</p> <p style="padding-left: 20px;">가.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에 따른 임대료를 3개월 이상 체납한 임차인 가구</p> <p style="padding-left: 20px;">나.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관리비를</p>

3. (생략)

② (생략)

<신설>

3개월 이상 체납한 입주자
가구

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
리에 관한 법률」 제25조
제1항제2호에 따른 관리단
의 사무 집행을 위한 비용
과 분담금을 3개월 이상
체납한 구분소유자 또는
점유자 가구

라. 「전기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단전(전류제한을 포
함한다), 「수도법」 제39
조에 따른 단수, 「도시가
스사업법」 제19조에 따른
단가스 가구

마.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가
구로서 주거복지 상담 및
지원이 필요한 자

4. (현행 제3호와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
산 또는 기금의 범위에서 주거
복지센터의 설치·운영 등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지원할 수 있다.

<p><u><신 설></u></p>	<p>④ 제1항 단서에 따라 주거복지센터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하는 경우, 시·도지사는 주거복지센터의 설치·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관할 구역의 주거복지 업무의 수요 등을 고려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담하게 할 수 있다.</p>
---------------------------	---